



주간통일정세 2010-24(2010.06.07~06.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국제사회 제재, 北발전 못 막아(6/7, 신화통신)

- 신통신은 6일자 북한 로동신문을 인용, 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적들의 어떠한 반(反)조선(북한) 제재 행위도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전진하는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현재 조선 곳곳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열기가 하늘을 찌르며 시시각각 놀라운 성과가 창조되고 있다”면서 “조선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모든 당과 국가, 인민들이 총동원되어 각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통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이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자”고 강조
- 또한 그는 “이 회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기술로 단기간 내에 남흥가스화대상건설을 완공한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면서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대량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했다”고 평가
- 김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와 기술관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료 생산을 실현하라”고 회사 측에 촉구하면서 내각과 다른 부처에도 “이 회사가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충분히 보장해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하라”고 촉구

● 北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선임, 총일 최영림(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열어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노동당 행정부장 겸직)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 내각 총리에 최영림을 임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약 두 달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냄.
-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공직 임명,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남 조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속 입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내각 부총리였던 곽범기, 오수용, 박명선 3명이 해임되고, 강능수 노동당 부장과 김락희 황해



남도 당 책임비서,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
위원 4명이 새로 부총리에 임명

- 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에게 내각 부총리를 겸임
토록 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 종전의 내
각 부총리 5명 가운데 로두철, 박수길 2명은 유임
- 장성택의 부위원장 승진으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의 부위
원장은 종전의 리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 그러나 국방위 위원 숫자는 김일철 전 인
민무력부 제1부부장(5월14일 해임)과 장성택 자리가 없어서 8명에
서 6명으로 줄어듦.
- 이 밖에 안정수가 경공업상에,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이 식료
일용공업상에, 박명철 국방위 참사가 체육상에 임명되고, 전임인
리주오 경공업상과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은
해임되었음.

● 北, 총리 등 프로필 공개(6/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된 최영림 총리와 장성택 국방위
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나이와 경력을 통신과 방송을 통
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
- 장 부위원장의 경우 1946년 1월22일에 출생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
업하고 1972년부터 당의 중요 직책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2007년부
터 당 행정부장을 맡아온 것으로 소개
- 직전 보직이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추정됐던 강능수 신임 부총리의
경우 영화부장과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것으로 소개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8일자 2면에 최 총리와 장 부위원장 등
8명의 사진과 약력을 실었는데, 이 신문은 작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
의에서 선출된 국방위 위원 8명의 사진을 게재했지만 경력은 소개하
지 않았음.



[최고인민회의 관련]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김정일과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개폐회사) 등 참석하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6/7, 중방·중통)
 - 안건 : ①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 ② 조직문제
 - 국방총 부위원장 장성택 등 선거 결과 및 약력 소개(6.8, 중통)

직책	신인(선거)	해임(소환)	참고사항
국방총 부위원장	장성택(65)		2007년부터 黨행정부장역임
내각 총리	최영림(81)	김영일	
내각 부총리	강능수(81), 김락희(78), 리태남(73), 전하철(83), 조병주(69), 한광복(65)	곽범기, 오수영, 박명선	조병주 (기계공업상 겸임) 한광복 (전자공업상 겸임)
경공업상	안정수	리주오	
식료일용 공업상	조영철	정연과	
체육상	박명철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체육지도위원회 →'체육성'으로 명칭변경 추정

[최고인민회의 이후 남한 전문가 의견]

- 장성택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를 재확인함으로써 후계구도 정립 과정에서 장성택에게 관리자 역할을 부여한 측면이 있음. 또 후계구도를 김정으로부터 바로 가져가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장성택에게 '중간다리'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장성택이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다시 확인
- 장성택의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은 그가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걸 대내외에 알린 것임. 책임과 권한을 모두 줌으로써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과 노동당 행정부장을 겸직하게 됐다는 점에서 당·정·군의 결속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음.
-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방위를 앞으로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고 전체적 후계 이양과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음. 국방위를 후계체제 구축의 근간 조직으로 삼을 것이라는 징후는 몇 년 전부터 법적 위상 강화나 직무기능 확대 등을 통해 감지되어 왔음.
- 화폐개혁 이후 틀어진 민심을 수습해 국가 기강을 확고히 통제하고 후계구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함. 내각 개편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에 대한 문제이고 내각의 상(相)들을 교체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음.
-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 기용된 인물들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자신이 전체 수뇌부 인사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견제함을 과시하려 한 것 같음.
- 총리와 부총리에 당 쪽 인사들이 많이 기용된 배경에는 노동당의 지도부에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가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음.



● **황장엽…김정일, 후계위해 장성택 선택(6/9, 데일리NK)**

- 데일리NK에 따르면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전 비서는 8일 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학생 ‘철학강좌’에서 “(김정일이) 후계체제 구축이나 국방위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장성택을 표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으로 김정일 정권의 실체가 극명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
- 이어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최선을 다한 셈이며 더 이상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또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한) 좌파에 힘을 실어주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해 (김정일)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차제에 남한 국민들에게 햇볕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성시켜 올바른 대북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897호」, 봉화화학공장 2직장 등에 ‘2중 26호 모범기대영예상’과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운수직장 등에 ‘26호 모범기대영예상’ 수여(6/8, 중방)
- 개성시·2.8비날론연합기업소·원산화학공장 종업원들, 반북대결 규탄 군중대회 진행(6/8, 중방)
- 평양방직기계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 각 지 공장-기업소-농장 종업원들의 ‘반북대결’ 규탄 군중집회 진행 (6/9, 중방·평방)

나. 경제

● **북한 채권값, 천안함사건 이후 소폭 상승(6/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 채권 가격은 소폭 올라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이 방송은 “최근 국제시장에서 북한 채권은 달러당 10.75센트 내지 12.75센트에 거래돼,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최고 30% 가까이 올랐다”면서 “2008년 달러당 30센트대를 유지하던 북한 채권은 작년 4월 6센트까지 떨어진 뒤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초 10센트 안팎에 거래됐다”고 전함.



● 北화폐개혁 유출 혐의 20대 처형위기(6/9, 데일리NK)

- 작년 11월말 단행된 화폐개혁 소식을 외부에 유출 혐의로 신의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 검거돼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고 데일리NK는 전함.
- 이 매체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신의주에서 휴대전화로 한국과 통화한 혐의를 받은 20대 강모 씨가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화폐개혁 사실을 외부에 처음 알린 혐의가 확정돼 처형 날짜가 잡혔다”며 강씨는 도매 물품 트럭 운전기사라고 밝힘.
- 소식통은 “이 젊은이가 화폐개혁 소식을 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체포된 시기는 4월이기 때문에 두 달 간에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강제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은 최근 인민보안부 산하에 ‘체제 단속’을 위한 특별경비대를 창설하는 등 반체제 사범 검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외부에 소식을 전해왔던 소식통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
- 이어 “북한 내 간첩 사건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2월 사리원에서 구걸을 하던 할머니와 5월 강원도 고성군 안변발전소 지배인이 모두 ‘간첩행위’혐의로 검거됐다고 덧붙임.

● 주체철(鐵) 기술을 학문으로?··北, 학회 설립(6/10, 조선신보)

- 북한이 ‘주체철’ 생산기술과 관련 이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난 1월 ‘주체철학회’를 설립했다고 조선신보가 뒤늦게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주체철학회는 이미 개발된 주체철 생산 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일을 함.
- 신보는 “내각 금속공업성의 일꾼들과 교육·연구·생산 단위의 권위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학회에 망라돼 있다”면서 “앞으로 주체철 생산 이론과 방법에 관한 과학기술토론회와 발표회를 활발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주체철’은 수입에 의존하는 중유와 코크스 대신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철강을 말하는데, 북한은 작년 12월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주체철 생산체계를 처음 완성한 이후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등에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내 경제)

- 70여개 市·郡 모내기 종료, 전국적으로 70% 모내기 완료 보도(6/9,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영유아 19% 저체중, 32% 발육부진(6/9,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다섯 가운데 하나 꼴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함.
 - VOA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해 9월말부터 약 한 달간 북한 10개 도의 300개 지역에서 7천 5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세 이하의 19%가 '저체중' 상태이고, 32%는 나이에 비해 키가 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北 TV, 대표팀 남아공 입성·훈련 소개(6/9, 조선중앙TV)**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조선 중앙TV도 남아공에 입성한 북한 대표팀의 소식을 전함.
 - 방송은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나라 남자 축구선수단이 남아프리카에서 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신심 드높이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팀은 평양시간으로 6월16일 3시30분에 브라질 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밝힘.
 - 김정훈 감독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번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세계적인 강팀인 브라질 팀, 포르투갈 팀, 코트디부아르 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기세가 충천하며 우리식의 전술로서 상대팀을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또 최길호 코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팀이 맞닥들일(맞설) 브라질 팀, 포르투갈 팀, 코트디부아르 팀과 대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력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팀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강조
 - 공격수인 문인국은 "우리는 1960년대 세계축구선수권대회처럼 다시 한 번 천리마 축구팀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겠다"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신화의 재연을 다짐함.

- **北 홍루몽 내달 5-7일 베이징서 연장공연(6/10, 신화통신)**
 - 통신은 중국을 순회공연 중인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다음 달 5-7일 베이징 연장 공연에 나선다고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맞춰 지난달 6-9일 베이징TV 대극장에서 홍루몽을 무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째 네이멍구(內蒙古) 호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사(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 중
 - 북·중간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홍루몽은 청나라 때 조설근(曹雪芹)이 지은 장편소설로, 주인공 가보옥(賈寶玉)과 여주인공 임대옥(林黛玉), 설보채(薛寶釵)의 비극적 사랑과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임.

● 北…평양 청년들, 15도 흑맥주 즐겨(6/10,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의 청년들은 알코올 도수가 15도나 되는 흑맥주를 즐기고, 여성들은 100% 흰쌀맥주를 많이 찾는다고 전함.
- 신보에 따르면 4월말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맥주집’에서는 알코올 15도와 10도의 흑맥주를 비롯해 100% 보리맥주와 100% 흰쌀맥주까지 모두 7종의 맥주를 팔고 있음.
- 이 맥주집에서 일하는 리영희(45)씨는 “장년층은 주로 보리 30%에 흰쌀 70%로 만들어진 ‘3번’ 맥주를 마시고, 청년들은 보리 80%에 흰쌀 20%가 섞인 15도짜리 ‘6번’ 흑맥주를 많이 마시며, 여성들은 흰쌀 100%로 만들어진 ‘5번’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함.
- 북한에서 가장 큰 맥주집인 경흥관은 1천개의 좌석을 갖추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나눠 영업을 함. 지배인 안선희(56)씨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새로 개발된 7가지 맥주의 질과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수도의 시민들에게 널리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신보에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대동강맥주공장에 발효탱크와 저장탱크가 여러 개 증설돼 맥주 생산능력이 2배로 늘었고, 평양 시내에 150여개 맥주집이 있다고 전한 바 있음.

● 北도 흡연女 증가?..여성금연 시기적절 평가(6/10, 조선신보)

- ‘세계 금연의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북한 보건성의 박정민 국장은 “현재 세계적 흡연유행이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담배산업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가장 유망한 이윤확보 원천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신보는 전함.
- 그는 또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담배통제법이 공포됐음을 강조
-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말 담배통제법에 따라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돼 있고, 평양의 금연제품 전시장에서는 금연보조제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보도

● 北 김일성종합대학 부속대 7곳으로 늘어(6/11, 조선신보)

-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지난 4월 부속대(단과대)로 재정대학을 신설한데 이어 5월에는 평양의학대학 등 3개 외부 대학을 흡수해, 부속대를 모두 7곳으로 늘렸다고 신보는 전함.
- 신보는 부속대로 흡수된 대학은 평양의학대학 외에 평양농업대학, 계응상농업대학 2곳이며, 이들 부속대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모표, 휘장을 사용한다고 덧붙임.
-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재정대학 설립 이전까지 문학대학, 법률대학,



컴퓨터과학대학 3곳의 부속대가 있었음.

- 북한 교육성 관계자는 “새로 흡수된 평양의학대학 등 3개 부속대에서는 중전과 같이 전문 과목인 의학, 농학을 교육하고 기타 일반과목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신보에 말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각각 4~5개 학과로 구성된 역사학부, 철학부, 물리학부 등의 학부별로 나뉘어,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회·인문·자연계 열 과목을 모두 가르치며, 1999년 컴퓨터과학대학이 처음 부속대로 설립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TV, 한국-그리스전만 방송 내보내지 않음(6/13, 연합뉴스)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안보리의장에 서한...검열단 확인 선행돼야(6/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8일 유엔 안전리 의장인 클라우스 헬러 유엔 주재 멕시코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보리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먼저 미국과 남조선이 피해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신 대사는 또 “피해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조사결과’만 안보리에 상정되고 논의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그때 가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헬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내용도 첨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 천안함 공격 동급잠수함 이란에 수출(6/10, 아사히신문; 연합뉴스)
 -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던 잠수함과 같은 급의 잠수함을 이란에 수출했다고 서울발로 보도
 - 이 신문은 복수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 침



몰시킨 잠수정과 같은 연어급 잠수함(130t급)을 수년전 이란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또한 “미국 정부가 최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의 하나로 2007년 전후 이란의 항구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연어급 잠수함 사진을 한국에 제공했다”면서 “크레인 등으로 잠수함을 이동하는 사진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

● 北-中 6.25전쟁 60주년 맞아 합작영화(6/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6.25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합작영화 제작에 나섬.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조(中朝)간 합작영화 제작을 협의하기 위해 리수이허(李水合) 중국영화제작인협회 부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중국 영화계 인사들이 지난 4-10일 북한 국가영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소개
- 이들은 방북 기간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이해성 제작국장과 4.25영화촬영소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대본과 합작 방식 등 합작 영화 제작 방안을 논의,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연내에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대표, 6/3 제네바군축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천안함 군사도발사태에 대해 “미국의 비호 밑에 꾸며낸 날조극, 모략극”이라고 강변하며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6/9, 중통)
- 日 하토야마 前총리 사임의 주요인은 “후덴마 駐日美軍기지 이설문제 등 정부가 자주적 대가 없이 대미추종을 한데 있다”며 “대미 굴종으로 얻은 것이란 치욕과 파멸 뿐”이라고 주장(6/10, 중방)



3. 대남정세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모략극을 폭로하는 비밀문건’(6.4, 중방)
- ‘합동조사단은 여론오도를 위한 위장간판’(6.4, 중방)
-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6.4, 중방)
- 김인찬(평양 충정중학교 부교장), 박영일(평양산원 실장), 장영근(김종태전 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자) 등 천안함 조사발표 비난(6.4, 중방)
-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무분별한 책동’(6.4, 평방)
- ‘북침전쟁 발발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발소동’(6.4, 중통·노동신문)
- 러시아 통신의 미군 잠수함에 의한 천안호 침몰 가능성 제기 사실 인용 보도(6.5, 중방)
-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조작극’(6.5, 중방)
- ‘역적패당의 노골화되는 대결광증’(6.5, 평방)
-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반역패당’(6.5, 평방)
- ‘북남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역적무리’(6.6, 평방)
- ‘동족을 모해하는 비열한 구걸외교’(6.6, 중통·민주조선)
- ‘궁색하고 유치한 변명’(6.7, 중통·노동신문)
- ‘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열한 자들의 모략극’(6.7, 중방·노동신문)
- ‘동족압살을 노린 추악한 망동’(6.8, 중통·노동신문)
- ‘갈수록 드러나는 천안호 침몰사건의 내막’(6.8, 평방)
- ‘역도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규탄한다’(6.8, 평방)
- ‘유치한 날조극’(6.8, 중방)
- ‘정치적 시녀의 가련한 구걸놀음’(6.9, 평방)
- ‘모험적인 정쟁광란, 전쟁광신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6.9, 중방)
- ‘역적패당의 범죄적 야망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6.9, 평방)
- ‘평화를 바라는 인민의 지향은 막을 수 없다’(6.9, 평방)
- 공개질의 : ‘천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2회(6.9, 평방)
- ‘함선 침몰의 진짜원인은 어디에 있는가’(6.9, 중방)
- ‘더욱 더 드러나는 반역패당의 정체’(6.9, 평방)
- ‘해상차단 행위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6.9, 평방)
- ‘대결 미치광이의 얼토당토 않은 궤변’(6.9, 중방)
- ‘사태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6.10, 평방)
- ‘역사에 유례없는 북풍 자작극’(6.10, 중방)
- 공개질의 : ‘천안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 3회(6.10, 평방)
-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광증’(6.10, 중통·노동신문)
- ‘역적패당이 내놓은 물증은 허위로 일관된 날조품’(6.10, 중방)
- ‘반역무리들의 범죄적 야망을 단호히 짓밟기겠다’(6.10, 중방)
-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6.10, 평방)
-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삼두마차’(6.10, 평방)

● 北, 귀순주민 송환요구(6/7,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일 백령도 해상을 통해 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 주민 1명의 송환을 2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요구해왔다고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가 밝혔다.



-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 동인이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우리 측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

● 北 미모 여대생 등장 동영상 눈길(6/9, 연합뉴스)

- 북한은 미모의 여대생을 등장시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한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동영상에는 짧은 단발머리 형태의 ‘보브 컷’ 머리를 한 ‘평양교원대학 박진주’라는 여대생이 나와 “얼마 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원래 살던 집도 좋았는데 나라에서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더 크고 넓은 새 집을 줬다”면서 노래하고 박수치는 단란한 가정 모습을 소개
- 이 동영상에서 여대생은 내레이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집 없이 헐벗고 있으며 방이 없어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화면을 통해 서구의 노숙자들 뿐 아니라 남한의 용산 참사 현장을 보여줘 우회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 탈북 시인인 장진성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영상물과 관련, “단순 동영상이 아니라 통전부가 제작한 의도된 편집물로 여대생이라는 여 주인공도 실제로는 통전부 산하의 대남 선전 요원일 것”이라며 “여대생의 헤어스타일도 북한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종의 ‘현지화’된 머리모양”이라고 말함.

● 북한군 전면 군사타격 진입…서울 불바다(6/12, 조선중앙통신)

- 남한군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조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하고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총참모부는 포고에서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이미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했다”며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
- 이어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하는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1차적으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내고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했던 것으로, 당시 이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우리 정부는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음.

● 北 통신…한상렬 목사 방북(6/12, 조선중앙통신)

- 당국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 가운데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당국 허가 없이 불법 방북함.
- 통신은 “남조선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
-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타 (대남)

- 6.2 지방선거 결과는 “자주, 민주, 통일세력의 승리이며 민심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주장(6/4, 평방)
 - ‘민심의 단호한 심판, 응당한 귀결’(6/5, 중통·노동신문)
 - ‘민심을 따라야 한다’(6/5, 중통·민주조선)
 - 대담, ‘응당한 귀결’(6/4, 평방)
- 통일부의 『2010년 통일교육지침서』 등 발간·배포는 “강압적인 대결의식 주입 책동”이라고 持續 비난(6/4, 평방)
- 한나라당의 봉은사 주지 외압설 관련,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진보세력은 물론 종교계까지 탄압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6/8,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안보리, 금주 ‘천안함’ 협의 개시(6/1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뉴욕 현지시간) 민군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을 받는 것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한 비공식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가 개시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 이와 관련, 클라우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천안함 브리핑 직후 전체 이사국 대표들과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이사국들 간에 비공식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대화에는 중국과 러시아 측 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 대표의 참석 여부에 대해 “회의일정에 중국 측도 동의를 한 상태이며 특별히 불참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며 “의장이 소집한 회의인 만큼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을 최종 채택할 때 개최되는 공식 회의(formal meeting)는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 정부는 주요 이사국들과의 물밑 의견조율 과정에서 대북 결의안(resolution)이나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등의 ‘형식’보다는 어떤 대북규탄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보리 대응 문안에 담을 주요 문구를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브리핑을 계기로 안보리 대응조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비공식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가 담겨지길 원한다”고 강조하고 “아직 초안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 15일 오전 4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안보리 의장은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한을 전체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음.



● <안보리 의장에 보낸 ‘정부서한’ 공개>(6/13)

- 정부가 지난 4일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영문본)이 13일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음. 서한에는 모두 7페이지에 걸친 조사결과 영문요약본과 사진 및 도표자료가 첨부됐음. 정부는 박인국 주(駐)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된 서한에서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의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 합동 조사단과 5개국 합동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가 수행한 조사에 의해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음.
- 정부는 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들을 근거로 이번 침몰사건의 원인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점이 판명났다”며 “나아가 이 어뢰가 북한 잠수함정에 의해 발사됐다는 결론을 압도적으로 입증해주는 추가적인 증거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armed attack)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자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 군사도발의 엄중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음. 첨부된 사진 및 도표자료는 ▲사고 전 천안함 사진과 복원된 선체와의 비교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선체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과 위쪽으로 꺾여있는 그래픽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한 다양한 흔적들을 담은 사진 ▲북한어뢰 제원과 일치하는 어뢰파편들의 모습 ▲북한 어뢰파편에 쓰여진 ‘1번’이라는 한글 표기 등임.

● “대북 제재안 잘 이행 안 된다”<유엔패널>(6/13)

- 북한에 대한 유엔의 두 차례 제재결의안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12일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192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111개국이 북한에 대한 두 차례 제재결의안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 보고서 미제출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북한과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수출) 활동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음.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등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제출했음.
- 이 결의안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나온 것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금지, 여행금지, 자산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약 30개국의 경우 첫 번째 결의안인 1718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제



출했지만 두 번째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음. 안보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고서가 이처럼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행되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보고서 미제출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재조치를 이행할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점이 유엔 제재조치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몇 가지 금지품목을 반출하려고 적발된 것에서 보듯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 미·영·중·러·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내주 천안함 사태 논의(6/1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비공개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가 10일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들은 또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회의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 헬러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자 회동에 이어 내주 전체 안보리 이사국을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난 협의 과정은 매우 유익했으며 다음주에도 논의를 계속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14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 이사국을 대상으로 침몰 원인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측은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헬러 의장 앞으로 보냈음.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제조사단에 참여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10일 베이징에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의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음. 장 교수는 또한 이 문제를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며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동서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최근 대남 비난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 위협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中 “천안함 사태 안보리 개입 신중해야”(6/10)

-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9일 방중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중국 측 관리들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중국은 친 차관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란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안보리의 개입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가 한국이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정식 회부한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국은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는데 반대하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하며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친 차관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했음. 한 소식통은 “중국은 그동안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친 차관은 이번 방중에서 외교부의 양제츠 부장과 추이 텐카이(崔天凱), 장즈쥘(張志軍) 부부장, 류진민(劉振民) 유엔담당 부장조리(차관보)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한국 측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낙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국 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친 대변인은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의 시시비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중국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유관 당사국이 이를 이해해 주길 희망한다”면서 “각국은 중국과 함께 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각국은 냉정과 절제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면서 유관당사국은 어렵게 이뤄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9일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중국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 “韓·美·日 공조, 北·中·러 협력 강화시킬 수도”(6/10)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부각되면 냉전 시대의 ‘남방삼각’ 부활을 연상시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에서 열린 ‘천안함 사태 이후 동아시아 정세’ 포럼에서 “천안함 사태로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의 미·일 갈등이 해소되고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조 위원은 또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대북 제재는 의장성명을 근거로 한·미·일과 EU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 위기 대응을 위해 오키나와 해병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미·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원안대로 관철하는 등 천안함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그는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는 장기적으로 북한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가 터지거나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갈수록 복잡해지는 ‘안보리 외교전’>(6/10)

- 유엔 안보리 무대에 오른 천안함 외교전이 ‘본게임’에 진입하고 있는 양상임. 그간 안보리의 최대 화두였던 이란 제재결의안 채택이 10일 완료되면서 이제 천안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민군 합동조사단이 금주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천안함 브리핑’을 갖는 것을 계기로 안보리 논의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논의의 초점은 대북 대응조치의 수위임.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성명과 같은 대응조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반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도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임.
- 그러나 안보리 논의가 정부의 기대대로 순항할지 미지수임. 각국의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타협’이 지난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요지부동’인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임. 가장 높은 대응수위인 대북 결의안이라는 ‘형식’에 부정적이고, 한 단계 아래 수위인



의장성명으로 가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베이징의 입장임.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 외교부와 당의 부부장급 인사들을 상대로 7시간에 걸쳐 마라톤 설득전을 폈으나 뚜렷한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천 차관은 중국이 민감하게 느끼는 ‘형식’ 논의를 피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설득을 시도했으며 특히 ‘내용’에 해당하는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의 문안을 놓고 우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 천 차관은 문안 조율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로서 앞으로 추가도발 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명기하는데 반대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의 이 같은 스탠스에는 북한의 거센 반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물론 양측 간 타협의 여지도 있어 보임. 중국도 기본적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안보리 대응을 놓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상당히 고민하는 기색이라는 관측이 나옴. 또 양측은 천 차관의 방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관측됨. 이에 따라 양측은 안보리 대응의 수위를 의장성명으로 정하되, 문안을 기술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쳐짐.
- 이 과정에서 내용의 강도를 높이려는 우리 측과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중국 사이에 첨예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임. 다만 양측이 문안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대북 결의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음. 대북 결의안은 표결로 통과여부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점이 문제임.
- 중국이 기권한다면 결의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반대표를 던진다면 결의안 자체가 통과될 수 없음. 미국도 중국의 강경한 스탠스를 의식해 대북 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명 쪽을 선호하는 기류가 감지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한 성명 (strong statement)이 유엔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유보적 태도도 변수임.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러시아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안보리 논의가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의 행보는 실제로 우리 측 조사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해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한 소식통은 “안보리 논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가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러시아는 안보리 논의동향을 지켜보면서 막판에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의 대응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9일 안보리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음. 유엔을 상대로 북한의 외교적 맞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임. 물론 이는 북한의 주장에 불과해 안보리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자칫 정치적 공방을 유도하며 논의 프로세스를 지연시킬 개연성은 있음.
- 안보리 내부의 논의일정표도 ‘기술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음.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은 일종의 필드트립(field trip, 단체시찰) 차원에서 19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24~26일 터키를 찾을 예정이다. 따라서 내주 중 안보리 논의가 ‘속결’되지 못한다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도 무리하게 논의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내용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아래 이사국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됨.

● 러시아, 천안함 조사 결과 “내달 공개”(6/9)

- 러시아 측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가 다음 달에야 공개될 것이라고 9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이날 연방의회(상원)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7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세르듀코프 장관은 “러시아 전문가팀이 한국에서 천안함 잔해와 어뢰 파편을 갖고 돌아왔다”면서 “침몰 원인을 확정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모든 관련 정보를 살피기 전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도 “러시아 전문가들은 아직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리아 노보스티는 전했다.
- 이 같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의 발언은, 러시아 해군 소속 전문가팀이 지난 7일 귀국한 이후 나오고 있는 관련 보도들이 현재 로선 신빙성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매체들은 군 고위 관계자와 조사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의 발언이라면서 러시아 조사팀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고 한 군 관계자가 전했다”라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한 것 같다”고 밝혔음. 일간지 콤포스몰스카야 프라브다는 한국을 방문한 한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했다면서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그러나 전문가팀이 귀국 후 국방부에 조사 활동 내용을 보고하긴 했으나 검증작업 등 러시아군의 종합적인 평가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국방부의 조사 결론이 나온 뒤에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러시아 측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소행으로 확신하고 러시아에 모든 자료와 증거물을 제공한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한편, 북한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앞서 북한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 결과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 美 “안보리 구체적 천안함 대응은 향후 논의”(6/9)

- 미국 국무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신이 전날 ‘강력한 성명이 유엔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힌 언급이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기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될 것이냐는 것은 향후 논의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우리는 이 문제가 향후 수주 내에 안보리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안보리로부터 적절한 대응이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 美 “유엔, 강력한 대북성명 기대”(6/8)

- 미국은 7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강력한 성명(strong statement)이 유엔에서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광범위한 대북 옵션들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음.
-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도발들과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하는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런 언급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외신과의 회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 또는 의장성명 중 어느 쪽을 추진하려 하는지 확



실치 않다”고 언급해 미묘한 파장을 낳은데 이은 것임. 이와 관련, 크롤리 차관보의 ‘생명’ 언급이 규탄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미 정부가 대북제재에 신중한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안보리 결의 보다는 의장성명을 선호한다는 분석은 제기돼 왔음. 크롤리 차관보는 또 게이츠 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들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는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광범위한 (대북) 옵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적인 (군사) 능력 측면에서 (군사)연습이나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련의 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북한의 지도부 교체 발표와 관련, 이유도 모르고 특별히 언급할 것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만든 상황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비가역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 의무 준수, 국제법 준수 및 도발적 행동 중단 등을 촉구했음. 그는 “북한 지도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그들 주민들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천영우 “안보리 추가 北제재결의 실익 없어”(6/8)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음. 천 차관은 이날 오전 중국 방문차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을 통해 다자적·양자적으로 취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그는 “다만,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이 같은 책임 이행 차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천 차관은 또 “이번 방중은 중국과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안보 관심사까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공감대와 공동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천 차관은 방중 기간 외교부의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과 우하이룽(吳海龍) 부장조리,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리우제이(劉結一) 부부장 등 미주 및 국제기구, 북한 담당 인사들과 두루 면담할 예정이지만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천 차관의 방중 계획을 소개하며 “안보리 대응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의 안보리 담당 인사들을 주로 만날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천안함 조사요구’ 일축>(6/12)

- 미국은 11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거듭 반박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면 그들의 어뢰 목록부터 작성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음. 앞서 그는 지난 달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북한이 검열단 파견을 주장했을 당시에도 “잃어버린 어뢰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싶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월요일(14일) 유엔의 공식회의에서 이번 (천안함) 조사를 실시한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뉴욕 현지시간 14일 오후 3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전한 상태임.

● 美, 대북·대이란 제재담당에 아인혼(6/11)

- 미국 국무부는 10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문제를 담당할 조정관에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부가 전날 아인혼 보좌관을 대북한 및 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에 임명했다고 공식 확인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아인혼 신임 조정관이 이란에 대한 제4차 제재결의인 1929호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과 더불어 대북 결의인 1781호 및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이 확산관련 장비 혹은 기술을 획득,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미국의 제재관련 노력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런 의미에서 아인혼 조정관이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가 겸직해온 대북제재조정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인혼 보좌관을 대북한, 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에 임명했다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제4차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것임. 클린턴 장관은 “아인혼(조정관)은 앞으로 유엔에서 나오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PBS방송에 출연, “미국 행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보좌관에게 이란과 북한에 대해 제재이행의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임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인혼 신임 조정관은 골드버그 차관보가 겸직해온 대북제재조정관의 역할은 물론 이란의 제재문제까지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됨.

- 아인혼은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에 깊이 관여했으며, 군축담당 차관보 재직 당시인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물망에 올랐지만, 막판에 상원 인준절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음.

● <美 대북제재 다시 켜다>(6/11)

- 미국이 10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이행을 담당하는 조정관에 임명한 것은 북한·이란에 대한 ‘목죄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의 경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던 제재시스템을 강화한 의미가 있음.
-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후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대북제재만을 전담하는 조정관으로 임명해 활동하도록 했음. 하지만 골드버그 조정관이 올해 초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음. 대북제재 조정관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자 심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에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한 바 있음. 워싱턴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라는 것”이라면서 “아인혼 보좌관이 대북제재 조정관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무부 내 실세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비확산·군축 전문가임.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진행된 북-미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 때 수행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하는 등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꼽히고 있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내정설까지 들었지만, 상원 인준절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음. 그는 이후 국무부에서 클린턴 장관의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을 맡으면서 이란과 북핵 문제 및 이들 국가에 대한 돈줄죄기 등에 관여해 왔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아인혼의 임명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인혼은 이번 임명으로 1인



3역의 ‘바쁜 사람’이 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인혼이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대북제재조정관, 대이란제재조정관 등 3가지 역할을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인혼의 1인3역에 대한 부담과 최근 이란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 집중 등을 이유로 대북 제재망이 얼마나 강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에 대한 발표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논의 마무리 이후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北과 제한적 충돌 대비 필요” <美전문가>(6/10)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제한적 충돌까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담당 선임 국장은 10일로 예정된 CNAS의 연례콘퍼런스에서 발표할 ‘미국 전략의 재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CNAS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공동설립한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음. 크로닌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 필요성을 제기했음. 그는 또 “연합사령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동맹 강화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핵심 현안”이라고 지적, 전작권 문제가 향후 한·미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음.
-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다자적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나 보상을 받고 행동하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을 무시하면서 성급히 달려가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음.

● “북미 ‘뉴욕채널’,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 <RFA>(6/10)

-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 대화창구이던 ‘뉴욕채널’(The New York channel)이 천안함 사건 이후 두 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리는 RFA에 “내가 아는 한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이후 뉴욕채널을 통해 미·북 간 어떤 접촉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뉴욕채널이 아직 열려 있기는 하다”고 말했음. RFA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북 양국은 뉴욕채널로 대화를 이어왔다”면서 “올해 들어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급감한 가운데 현재는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도 없어 사실상 양국 간 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북 정부 간 대화와 민간교류, 6자 회담 재개 등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RFA에 밝혔음. ‘뉴욕채널’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한 미·북 양국 간 비공식 대화채널을 지칭하는 것인데,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미수교국인 미국 내에서 유일한 북한의 외교 창구임.

● “美, 北의도 파악에 큰 어려움” <키팅>(6/8)

- 티머시 키팅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8일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키팅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의 목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도통신의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승계 문제는 전혀 확실치가 않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비한 미국과 우방의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북한 (권력) 승계 문제는 아주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음.
-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무자비한 행위”라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의 결론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음. 키팅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이 북한의 주요 후원국으로서 대북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중국이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 “잔학행위”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분노를 표해주시기를”바란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대해 “항상 확신해온 것과 같이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며 간나오토 총리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도 양국이 안정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음.

다. 중·북 관계

● “탈북자 10명 중단등서 강제 복송”(6/13)

- 중국 단둥(丹東)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0명이 지난 3일 오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이 13일 밝혔음.
- 이 단체 관계자는 “남한행을 위해 단둥의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던 탈북자 13명이 지난달 29일 체포돼 이중 5살과 6살 된 어린이 3명은 석방됐으나 성인 10명은 복송됐다”며 “강제 송환된 이들은 50, 60대 남성 2명과 20, 30대 여성 8명”이라고 전했음.
- 그는 “남한행을 감행하다가 복송된 탈북자들은 ‘반역자’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에게 탄원편지 글쓰기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음.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의 ‘긴급 캠페인 참여하기’ 코너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전화와 팩스 번호를 공개하는 한편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보내는 영문 편지 양식을 게재해 놓고 서명을 받고 있음.

● 北-中 6.25전쟁 60주년 맞아 합작영화(6/11)

- 북한과 중국이 6.25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합작영화 제작에 나섰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조(中朝)간 합작영화 제작을 협의하기 위해 리수이허(李水合) 중국영화제작인협회 부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중국 영화계 인사들이 지난 4~10일 북한 국가영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소개했음.
- 이들은 방북 기간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이해성 제작국장과 4.25영화촬영소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대본과 합작 방식 등 합작 영화 제작 방안을 논의,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연내에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했음.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합작 영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다만,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고 중·조간 우의를 칭송하기 위한 영화라고 밝혀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참전과 ‘승리’를 다룬 영화일 것으로 보임.

● 中 “천안함 사태 안보리 개입 신중해야”(6/10)

-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9일 방중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중국 측 관리들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친 대변인은 “중국은 천 차관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란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안보리의 개입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중국 정부가 한국이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정식 회부한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은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는데 반대하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하며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천 차관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했음. 한 소식통은 “중국은 그동안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천 차관은 이번 방중에서 외교부의 양제츠부장과 추이



텐카이(崔天凱), 장즈쥘(張志軍) 부부장, 류전민(劉振民) 유엔담당 부장조리(차관보)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한국 측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낙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국 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친 대변인은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의 시시비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중국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유관 당사국이 이를 이해해 주길 희망한다”면서 “각국은 중국과 함께 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각국은 냉정과 절제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면서 유관당사국은 어렵게 이뤄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9일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중국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 北, 中에 충격사건 관련자 엄벌 약속(6/10)

- 북한이 자국 경비대의 충격으로 중국인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는 지난 4일 새벽 북한과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변경 무역 활동을 하다 북한 변방 부대의 충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것임.
- 이들 4명은 모두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접경지인 단둥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해당 국경경비대를 1차 조사한 결과 ‘우발적인’ 충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로인한 사망자들과 유가족에 슬픔과 애도를 랴오닝성 정부에 전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추가조사를 거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랴오닝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은 외교부와 랴오닝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북한에 전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압박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경비대의 충격으로 중국인 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해 북한 측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다”면서 “현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관 당국이 적절한 시



기에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이어 랴오닝성 정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이번 사건에 주목하면서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 당국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신화통신은 현재 북·중간에 이번 총격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도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압록강 하류 신의주 부근에서 밀수를 위해 북한으로 접근하던 중국인 밀수꾼들이 탄 배에 북한 경비대가 사격을 가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음.

● 中, 北경비대 총격 사건 확인(6/8)

- 중국 정부가 북한 경비대의 총격으로 최근 중국인 3명이 사망했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새벽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변경 무역 활동을 하다 북한 변방 부대의 총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음. 친 대변인은 “중국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해 북한 측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다”면서 “현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관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한국 언론들은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압록강 하류 신의주 부근에서 밀수를 위해 북한으로 접근하던 중국인 밀수꾼들이 탄 배에 북한 경비대가 사격을 가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북한은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신의주에서 북한 군인들이 낙하산 훈련을 하거나 배를 타고 압록강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음.
- 중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 경비대의 총격으로 중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중국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음. 한편 친 대변인은 전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매제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한 것과 관련, “이는 북한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김정일 매제가 북한의 섭정왕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음.

● 中 지린성 “北 자원개발·교역 확대 추진”(6/8)

- 중국 지린(吉林)성이 북한의 자원 개발과 교역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지린성이 중국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북한 시장 개척과 변경 무역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이 8일 보도했음. 지린성은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변경지역에 가공 수출과 국제 물류 기능을 갖춘 변경 합작구를 건설하기로 했음. 또 북중 합작을 통해 북한의 광산과 천연가스, 산림 자원, 농업 부산물 등 천연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음.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위



해 지린성은 북중 간 통상구 확대와 노후 교량 보수 등 통로 정비에도 힘쓸 계획임. 지린성은 접경인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도 꾀하고 있음.

- 지린성 상무부 휘위(霍玉) 부청장은 “지난해 국무원이 승인한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해 북한, 러시아와의 교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프로젝트는 창춘과 지린, 두만강 일대를 단일 경제 벨트로 개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진흥책으로, 국무원은 지난해 11월 이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승인했음.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 동해 항로를 확보했으며 청진항 사용권을 추가로 얻어내 고자 북한과 협의 중임

라. 기 타

● “헤즈볼라 지하시설 대부분 北감독아래 건설”(6/12)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만든 대부분의 지하시설이 지난 2003~2004년 북한 감독관들의 지휘하에 건설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11일 ‘북한과 테러리즘 지원: 진화 역사’라는 글을 통해 과거에 나왔던 일부 보도들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다. 벡톨 교수는 “이들 시설은 꽤 넓고, 부상자들을 위한 치료시설과 식량 저장소, 무기 저장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동안 북한이 미얀마(버마) 군부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고, 헤즈볼라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기술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벡톨 교수는 또 “시리아의 개혁당(RPS)은 지난 2008년 헤즈볼라가 북한으로부터 화학무기용 물질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RPS에 따르면 겨자와 신경가스를 헤즈볼라가 시리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그는 이밖에 지금까지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나 관련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및 스리랑카의 타밀반군 등에 대한 북한의 무기지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음.

● 미얀마, 핵개발 北협력 의혹 부인(6/12)

- 미얀마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얻는데 북한의 협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음. 미얀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의혹은 미얀마의 국가적 이익을 손상시키려는 이들과 언론 매체로부터 기인한 잘못된 정보”라며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의혹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11일 밝혔음.
- 미국 abc뉴스는 최근 미얀마에서 망명한 장교인 사인 테인 원과의 인터뷰 및 그가 제시한 문서들을 토대로 북한이 미얀마의 핵무기 프



로그랩 개발을 돕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음. 스콧 마르시엘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핵개발 지원을 얻는 것으로 의심받는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안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난 10일 지적했음.

● <美 블로거, 평양 대공포망 ‘베일’ 벗겼다>(6/11)

- “평양은 아마 지구상에서 대공 방어능력이 가장 강력한 수도일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 블로거가 수년간 구글어스 위성 영상을 분석해 북한 평양의 대공포 배치도를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음. 블로거 ‘플레인맨(Planeman)’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http://planeman-bluffersguide.blogspot.com>)에 ‘평양 일대의 대공포 배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한 북한의 수도-방어망 해부’라는 포스트를 올렸음. 플레인맨은 북위 38.77~39.35도, 동경 125.25~126.25도 사이의 평양 일원을 샅샅이 훑은 결과, 모두 424곳의 대공포 진지를 찾아냈다고 밝혔음. 포문의 구경별로는 가장 큰 100mm가 11곳(3%)이었고 나머지는 57mm 49곳(12%), 37mm 114곳(27%), 14.5mm 250곳(59%)이었음.
- 대공포의 사거리를 반영해 그린 ‘화망도’를 보면 평양에는 대공포들이 서로 중첩될 정도로 촘촘히 설치돼 매우 위협적인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분석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평양에는 사거리가 대공포보다 길고 레이더 추적 기능도 갖춘 여러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SAM)이 밀도 높게 배치돼 있어, 유사시 평양을 공습할 항공기에 강력한 위협이 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함. 플레인맨은 “대공포가 무수히 많이 배치돼 있지만 순항미사일이나, 고고도에서 고속 이동하는 제트기, 스텔스기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양 대공포망의 ‘약점’을 지적했음. 그는 “대공포 진지의 경우 장비가 상대적으로 작아 고해상도 상업 영상에서도 식별해내기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구글어스를 통해 수년간 북한 대공포를 관찰한 경험이 최고의 가이드가 돼 졌다”고 밝혔음.

● 반인도범죄조사위 ‘천안함 사태’ ICC에 고발(6/8)

-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8일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함. 반인도범죄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천안함 주범-전쟁범죄자 김정일 ICC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26일 군사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김정일을 ICC에 고발한다”고 밝혔음. 이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전쟁범죄’ 2항 행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음. 또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2조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ICC를 통해 불법적 군사 공격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 재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번 회견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직접 그린 수용소 그림을 공개할 예정

● <러 전문가팀 귀국…천안함 판단 주목>(6/7)

-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단이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 귀국,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됨. 1주일간 한국에 머문 이들은 국방부에 조사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외교·안보 라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크렘린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당국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물증 제시에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음.
-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회부한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 전문가팀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음. 만약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의문을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밖에 없음. 반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침몰원인이라는 합동조사단 발표를 확인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미루거나 ‘한국 측의 조사 결과를 상당히 신뢰하지만 북한에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음.
- 한편, 우리 군은 러시아 전문가팀이 러시아로 돌아가기 직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표현한 것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러시아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동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임.
- 다만, 러시아 정부가 과거 제재에 앞서 침몰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견해를 보인 만큼 자국 전문가팀의 조사에서도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또 이번 전문가팀의 조사 결과를 중국과 공유하고 안보리에서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이란 변수’, 천안함 안보리 대응 영향줄까>(6/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 중인 이란 문제가 정부의 천안함 안보리 대응의 변수로 떠올랐음.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여러 현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현재 안보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등 진행 중인 사안이 많다”면서 “안보리가 이번 주 안에 천안함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고 말했음. 게다가 이란 문제가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핵 문제가 갖는 속성상 대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 실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을 만나 “(미국이) 이란 핵 제재 결의에 대해 표결로 몰아가려는 것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음.
- 따라서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한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입장에 있는 상임이사국들과 ‘주고받기 식’의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임. 다시 말해, 대이란 추가 제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 등의 동의를 절실한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임.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란 문제가 천안함 논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안보리가 다루는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주고받기 식’의 타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임. 정부 핵심당국자는 “사안별로 안보리 이사국 간 전략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실제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이란 문제 등으로 천안함 문제에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게다가 이란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보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문제는 14일주부터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올해 들어 對美 무역흑자 급감(6/13)

-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의 대미(對美)수출이 약간 증가한 반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할 때 대미 무역흑자가 4분의 3이상 줄어든 것으로 13일 드러났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미국의 대외무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한국은 미국에 38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에 32억 달러를 수입, 6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 또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모두 138억 2천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에 126억 2천만 달러를 수입해 12억 달러의 흑자를 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흑자규모 50억 달러에 비해 무려 38억 달러,



76%나 급감한 것임. 작년과 비교할 때 수출은 127억 4천만 달러에서 138억 2천만 달러로 10억 8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작년 77억 3천만 달러에서 올해 126억 2천만 달러로 48억 9천만 달러나 크게 늘었음.

-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48억 8천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에 34억 5천만 달러를 수입해 14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 한미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있어 한국은 올해 4월까지 모두 32억 8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2억 7천만 달러를 수입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 분야에서만 3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음. 한편,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4월에 북한에 1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4월까지 모두 30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에 수입은 전혀 없다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의 경우 미국은 4월 한 달간 1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4월까지 북한에 4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음.

● “합조단, 美·日에 천안함 개별 브리핑”(6/11)

-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내주 초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기에 앞서 11일(뉴욕 현지시간)께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개별 브리핑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합조단이 전체 이사국 대상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에 대해 사전 설명기회를 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전체 브리핑 일정과 형식은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이사국들을 초청해 비공개 브리핑을 갖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대표부측은 9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가 14일 비공개 브리핑을 갖는 방안을 이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음. 합조단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발표때 설명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어뢰추진체 인양 당시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쌍끌이 어선을 이용한 어뢰추진체 인양작전 ▲천안함과 어뢰추진체에 흡착된 산화알루미늄 성분분석 결과 ▲수조를 이용한 수중폭발 실험 ▲천안함과 해저에서 검출한 화약 성분 분석결과 ▲250kg 정도의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이 담겨있음.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美상원중진, 11월前 한미FTA 비준안 제출 요구(6/9)

-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8일 미 정부에 대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음. 웹 위원장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클린턴 장관이 요청해 주기를 기대했음. 그는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지연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준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음.

● <李대통령, 올브라이트 전 美국무 접견>(6/7)

-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음. 앞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처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곧바로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대북 제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천안함 사건 당시 한·미 대잠훈련”<AP>(6/7)

-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75마일(120km) 떨어진 곳에서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 통신은 한·미 양국 군의 대잠수함 훈련은 3월 25일 저녁 10시에 시작돼 다음날(26일) 저녁 9시에 끝났다고 주한미군 대변인인 제인 크라이튼 대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미 구축함 2척과 다른 함정들이 한국 잠수함이 표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추적 훈련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통신은 이 훈련은 한·미 연례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해군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천안함 침몰 당시 한·미 양국이 충남 태안반도 서쪽 격비도 이남 해상에서 훈련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사건 당일 대잠훈련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해역과는 120km 이상 떨어져 있어 사건을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韓·중간 최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필요”(6/10)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미·중 전략경제대화 같은 최고위급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하고 “밀접한 경제관계에 비해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미흡한 한·중 간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작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이런 최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제 2차 전략경제대화를 열고 안보와 경제 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음. 이 회의에서 미국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회담 대표로 참석했음.

- KIEP는 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략경제대화가 내포하는 가장 큰 의의는 미·중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갈등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해 안정적 양자관계를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또, KIEP는 향후 미·중 양국이 경제 및 글로벌·지역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과 균형, 협력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가면서도 전반적인 협력구도를 훼손시키는 대응은 서로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음.

● 외교 2차관, 中과 안보리대응 협의(6/9)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중국을 방문, 중국 측 인사들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천 차관은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외교부의 유엔 담당 고위층을 만난데 이어 양제츠 외교부장과 면담했음.
- 천 차관은 이어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음.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진 가운데 중국이 대북 대응조치의 수위와 강도를 정하는 키를 쥐는 상황에서 천 차관은 중국 유엔 안보리 담당 외교라인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향후 안보리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을 통한 한·중 양자회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안보리에 올라간 천안함 사건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음. 천 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사와 면담했으나 중국 대사와는 접촉하지 않았음. 천 차관은 9일 오전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고 오후에 귀국할 예정임. 천 차관은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 (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음.
- 천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이번 방중의 목적”이라며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 간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그는 ‘중국과의 협의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미리 우리 기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진 만큼 안보리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영우 차관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이틀 일정으로 방중, 외교부의 지도부와 만나 국제 및 지역 정세의 공통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천 차관이 주중 북한대사관의 초청으로 방중했다고 잘못 발표했다 취재진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한국대사관으로 정정했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하며, 그런 까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하며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친 대변인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유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 日총리에 취임 축하 전화(6/10)**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취임을 축하했음. 간 총리는 축하 인사를 받은 뒤 “2년 전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명 받았다. 이웃나라 총리로서 양국 우호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간 총리는 특히 “올해가 한일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 만큼 역사를 직시할 뿐 아니라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백년의 과거에 매몰될 수만은 없다”면서 “앞으로의 백년을 위해 과거를 던고 일어서는 미래지향적 조치를 취하고 함께 노력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음. 양국 정상은 이어 천안함 사태 관련 안건의 유엔 안보리 처리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다짐했음. 간 총리는 “하토야마 정부 때



와 다름없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재개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희망했음. 이에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음. 이날 한일 정상간 통화는 오후 5시50분부터 15분간 이뤄졌음.

라. 미·중 관계

● 美, 中 ‘천안함 대응’ 동참 촉구(6/11)

- 미국 국무부는 10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거듭 지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미 합참의장의 전날 언급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런 종류의 도발적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문제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 기반해 우리가 듣고 이해한 것에 대해 정확히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中 “미국채 보유 방침 의심 말라”(6/11)

-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방침에 대해 “의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 일각에서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투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말길 바란다”면서 “채권 매각은 시장 원칙에 입각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 문제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윈-윈으로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보유 외환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천 952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규모를 늘린 바 있음.

● 美상원 증진 “천안함 안보리 회부는 중국에 기회”(6/11)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웹 동아태소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중국이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음. RFA에 따르면 웹 위원장은 9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천안함 사건 해결에 앞장선다면 (중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중국으로서는 지금이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음.

- 행사에 함께 참석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최근 상원 정보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보 당국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美, 항모 서해훈련 참가 중단해야” <환구시보> (6/9)

- 중국 관영 언론이 이달 말 서해에서 실시될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은 중국 문 앞에서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라”는 제목의 9일자 사설에서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을 위협하는 행위로 수많은 중국인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음.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황해(서해)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제목이 달린 같은 내용의 사설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음.
- 신문은 96%의 네티즌이 미국이 서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경우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어느 누가 적이 자기 집 앞에서 흥기를 들고 호시탐탐 침입을 노리는 것에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음.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적이 될 생각이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인의 감정을 존중해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중국인이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안정시키길 원한다면 다른 나라 국민의 감정과 사회적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날 사설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참가 여부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미 항모의 참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논조가 전개됐음. 이 신문은 전날 기사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훈련 참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자제를 함께 촉구했으나 이날 사설에서는 한국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미국만을 겨냥했음.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정도에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할 예정임.

● 美, 中드릴파이프에 예비상계관세(6/9)

- 미국 상무부가 1억 1천 9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드릴파이프 제품에 예비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음.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드릴파이프 수출업자들이 15.72%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런 예비판정을 내렸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중국산 드릴파이프 제품의 불공정 여부를 따져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그로 인해 미국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림. 차이나데일리는 미 상무부의 이런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다름없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中, 서해훈련에 美항모 출현 가능성 우려(6/8)

- 중국은 이달 말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할 가능성에 내심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8일 조지 워싱턴호의 훈련 참가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미 양국에 항모를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했음.
- 환구시보는 이날 톱기사에서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군사훈련 참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미국 항모의 서해 훈련 참가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이는 남북 간에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중국 외교부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晋林波) 연구원은 이 날짜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서해에 군사력을 투입할 구실을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 항모의 진입으로 서해의 안전에 낙관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음.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해 안보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서해는 중국으로서도 앞마당이기 때문에 중국을 작전반경으로 포함하는 미국 항모의 진입은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임.
- 환구시보는 이어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이 미군에 갖는 감정을 고려하고 중국의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어느 행동 하나도 일보를 내디디기도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음.
-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과도한 반응을 보여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미 항모를 서해에 끌어들이면 중국 국민에게 미치는 한국의 이미지 손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국 네티즌들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에 전반적으로 경각심과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사태를 악화시켜 중국이 폭넓은 정책적 선택을 할 여지를 줄이지 말라고 촉구했음. 사설은 동북아에서 중요 군사세력인 미국도 중·미 관계 등을 고려해 항모의 서해 훈련 참여에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 한편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서해 군사훈련이 이달 말로 연기된 데 대해 논평을 요구받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음.

● “美-中 군사적 긴장관계 극명 표출” <WSJ>(6/7)

-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와 제반 국제현안을 놓고 해묵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노골적이지만 품의를 갖춘 형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음. 저널은 중국이 금년 초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단절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 이는 불과 지난달만 해도 게이츠 장관의 방문을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적 돌파구’라며 기대를 보냈던 미국 관리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게이츠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은 물론 싱가포르행 기내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음.
- 게이츠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군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따른 “실질적인 대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중국이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해 이번 회의를 중단키로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무기판매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데다 방어차원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국방대학교의 고위 간부 주칭후 소장은 게이츠 장관의 연설이 끝난 뒤 자신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것은 상호 대화를 하지 않기 위한 합법적인 이유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기판매의 유일한 목적은 중국의 통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주 소장은 특히 “이 같은 무기판매는 중국이 미국을 동반자로 여기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진전이 없는 군사 분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게이츠 장관은 강연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마시아오티안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과 악수를 했으나 예년과 달리 중국 측과 별도의 회의를 갖지 않았음. 마 소장은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판매는 정



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면서 미국의 이런 행위가 지난 30년간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무기판매를 강제 중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합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음.

- 양측의 대립은 이후 이어진 게이츠 장관과 주 소장간의 설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음. 주 소장이 게이츠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터키 주도의 구호선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물고 늘어진 것.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경우 천안함을 기습 공격한 반면 이스라엘은 구호선에 가자지구 접근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를 보냈으며 양측 사건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실책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국제적인 신뢰가 있는 조사를 할 가치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해 놀라울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음.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후텐마 해결기한 너무 짧았다”(6/11)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 기간으로 약속한 6개월은 너무 짧았다고 술회했음.
-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민영방송인 TV 아사히의 프로그램에 녹화하면서 지난해 12월 “후텐마 기지 문제를 (6개월 후인) 5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지금 생각하면 반년은 너무 짧았다”고 말했음. ‘5월말’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까 생각했다. 오키나와도 미국도 1년 (기다리는 것)은 무리일 테니까, 그 절반인 5월 말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음.
- 애초 오키나와(沖繩)현 밖으로 기지를 옮기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바꾼 과정도 설명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애초 미국령 괌으로 옮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억지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도쿠노시마(徳之島)를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음.
- 도쿠노시마로 옮기자고 마음먹은 때도 있었지만 4월부터 헤노코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음. 또 그는 (“결국은 헤노코’라는 생각이) 정부 부처에도, 미국에도 있었다. 총리 관저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에 결국 헤노코로 결정했다”는 말도 했음. 한편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깨끗한 정치를 만들려고 총리가 된 사람이 청렴한지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문



제로 불신감을 가져왔지만 당에 담력과 박력을 불어넣었다”며 “영향력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日, 조기 정상회담 추진”<NHK>(6/11)

- 하토야마 내각 시절에 삐걱거린 미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11일 NHK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계획임. 지난 8일간 내각이 출범한 뒤 미 고위 관리가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캠벨 차관보는 총리 관저를 방문하고, 외무성 간부를 만나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미국 측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시절에 손상된 미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캠벨 차관보가 조기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 후텐마 주일미군 기지 이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미일 양국은 내주 도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외무·방위(국방) 당국의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또 존 루스 주일 미 대사는 18일부터 4일간 오키나와현을 방문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와 회담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음. 루스 대사는 이번 방문에서 미일 정부가 합의한 오키나와 진흥책 등에 대해 나카이마 지사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 美백악관 “미일관계 원만해질 것”(6/8)

-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신임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 미일 관계가 더 원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베이더 보좌관은 이날 싱크탱크 스티븐슨센터 연설에서 50년 동안 동맹관계를 맺어온 양국 간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에게 취한 대처방식을 강력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음.
- 그는 나오토 총리가 일본 내각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중단됐던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작년 9-10월과 같은 어려운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普天間)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힌 나오토 총리와 5일 가진 전화통화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 내각이 승인했고 나오토 총리도 승인했다”면서 “따라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바. 중·러 관계

● 후진타오, 러시아에 군사협력 확대 요청(6/1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경제·군사협력 확대를 요청했음. 후 주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앞서 회동했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과 후 주석이 지난달 모스크바 방문 때 제안한 것들을 토대로 논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후 주석은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테러리즘·극단주의·분열주의 등 3대 사회 불안세력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었음.
-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전문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는 후 주석이 “양국이 무역과 경제, 에너지,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실질적 성과들을 더 많이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을 방문함.
- 한편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국가들의 협력 청사진을 담은 정치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인 세르게이 프리코드코는 “이번 SCO는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고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회원국으로는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거명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의 가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음. SCO는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상호 신뢰와 우호 증진, 역내 평화·안보·안정·협력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중앙아시아 최대 기구로 성장했음. 현재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정식회원국임.

사. 기 타

● “EU의회, 연말까지 한·EU FTA 비준동의 의지”(6/11)

- 유럽연합(EU) 의회의 크리스티안 엘러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11일 “EU 의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연말까지 비준동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EU 의회의 한반도관계 대표단 및 FTA 보고관을 이끌고 7일부터 방한 중인 엘러 대표는 이날 서울시내 EU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EU이사회 사무국에서 가서명된 협정문을 16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엘러 대표는 “EU의회는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한·EU FTA



비준동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번역작업을 오는 8월까지 끝내서 곧바로 협정문안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늦어지자 EU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갖고 있지만 협정문 번역이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일치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또 “한국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연계돼 있지만 EU의회는 그렇지 않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FTA 비준동의를 위한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면서 “자동차 회사 등에서 FTA에 대해 계속 로비를 하고 있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든 연말까지는 처리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천안함 사태와 관련, 엘러 대표는 “조건만 EU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해 협의하고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동안 북한과 접촉하면서 북한이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책에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와중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해 다소 의외로 받아들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EU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언급,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EU가 대북식량지원까지 중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EU의회의 한반도관계 대표단은 지금까지 매년 한 차례씩 남북한을 방문해왔고 올해도 3월초까지 북한 측과 방북문제를 논의했으나 천안함사태가 발생, 방북을 취소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다고 엘러 대표는 전했다. 엘러대표는 한-EU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논의에 대해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EU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과 아시아 관계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나로호 실패 원인 공정 조사 필요” <러 신문>(6/11)

-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책임을 돌리기 전에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러시아 정부 기관지가 주장했다. 11일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나로호 발사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현재 실패 원인이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는 1단 발사체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좀 더 공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지난해 1차 발사 실패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한 한국이 이번에는 일제히 러시아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발사체 제작업체인 흐루니체프 사(社)가 제작한 1단 발사체가 작동하는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신문은 그러나 흐루니체프 사가 1단 발사체에 결함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면서도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나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전했다. 흐루니체프 사는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특별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만약 1단 발사체에서 결함이 있었다면 3번째 발사체 또한 러시아가 만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상으로 1,2차 발사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러측이 1단부 로켓을 무상 제공하게 돼 있는데 1차 발사 실패 후 한 차례 1단 발사체를 제공했던 러시아가 다시 무상으로 1단을 제공해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신문은 “한국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기술자들의 피로, 무리한 발사 강행 등 한국 측에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연방우주청 안렉산드르 바라비요프 대변인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로켓 발사 초반기에는 2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많은 실험적인 의미가 담긴 두 번째 발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번 나로호 개발과 발사에 참여한 한국 연구원들과 기술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발사체 엔진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면 다음에는 문제없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흐루니체프 사가 개발해 우리 측에 인도한 1단 액체로켓은 지난해 8월 발사된 1단 발사체와 같은 모델로 러시아의 차세대 로켓 개발 프로그램인 앙가라 로켓 계열인 RD151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